

정부여당의 경제 현안 해소 방안

- 출처 : 한경미래니엄포럼
- 일시 : 2005년 10월 13일
- 연사 : 정세균 열린우리당 임시 당의장
-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1. 현 상황의 문제점

참여정부 이후 경제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많았음 (정세균 열린우리당 임시 당의장)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경제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았기 때문에 그 성적들은 초라한 것이라고 자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환위기의 후유증을 아직도 겪고 있기 때문에 1998년도와 오늘의 경제 현상을 비교하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가 가져다 준 좋지 않은 영향, 또 과거의 오일 쇼크를 능가하는 고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기업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여건을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나 IMD, S&P, 무디스 등 해외 평가 기관에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어려운 경제주체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에 눈부신, 특히 한강의 기적을 이룬 압축성장 기간 동안 세계의 최고 우등생이었습니다.

IT 기술과 한류의
시너지 효과 등 한
국인 특유의 저력
이 미래를 밝게 해
주고 있음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IT 기술과 한류가 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올라가고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인들이나 서양인들의 비해서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한번 결심하면 신속하게 뭔가를 해내는 것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 실력이나 배경이 없으면서도 두둑한 배경으로 밀어붙이는 뚝심을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분명히 저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교육
비 등으로 우리나라
는 고비용형 사
회구조라는 문제점
을 안고 있음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의 사회구조 자체가 고비용 구조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고비용 구조의 중심에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입니다. 국제 기준에 비해서, GDP 수준이나 개인소득 수준에 비해서, 부동산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다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 등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너무 많고 청년실업이 매우 높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콜금리 인상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어차피 인위적으로 경기를 살리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그에 맞는 방법을 활용해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성장률이나 보이는 실적 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간의 금리 차이나 국내 시장에 대한 신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극도로 자제를 하고, 또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저점을 지난 것을 확실하나 그 회복속도는 다소 완만함

지난달에 수출이 247억 달러로 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3,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정도니까 우리가 100억 달러 수출했을 때 크게 자축하던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저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도 약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투자 쪽은 아직도 부진해서 도대체 우리 경제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저점은 확실히 지난 것 같아요. 다만 속도가 완만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2. 외환위기의 극복과 양극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요인이 산재해 있긴 하지만 국민의 정부부터 정책에 관여한 저로서는 4대 개혁(금융·기업·공공·노동개혁)을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공과가 있긴 합니다. 금융과 기업 쪽은 상당히 잘한 부분이고 공공이나 노동부문은 좀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금융부문 개혁은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잘 했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공적자금이 회수되고 하거든요. 금융개혁을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및 금융의 국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금융개혁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은행들의 리스크 회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겪게 되었음

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일은행을 매각한 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잘 한 것 같지 않다고 평가들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상황을 가지고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면 견뎌낼 힘이 없죠. 그 당시 금융 국제화를 주장할 때 외국의 선진 금융기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가계대출만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업대출 실적은 미미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돈이 잘 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행태는 리스크를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금융기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금융기관들은 리스크를 싫어하죠. 그러나 돈은 흘러야 되는 것이고 또 리스크를 제대로 판단을 해서 리스크를 취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프리미엄을 받는 것 또한 금융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요즘 보면 중소기업들은 거의 돈 구경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소기업들은 사채시장을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소기업들이 기술력도 없고 아무런 경쟁력이 없어서 금융기관이 거들떠보지 않아야 하는 상대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금융개혁을 열심히 잘 해서 금융기관들은 건전해지고 경쟁력도 올라갔지만 그들이 국가 경제에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한계 기업을 양산한 책임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동시장은 유연화 되었지만 비정규직의 양산과 청년실업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다음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엄청나게 양산이 되었고 그들과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2 : 1 보다 훨씬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기업 경영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결국은 국가 경제에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또 글로벌 경영이라고 해서 우리의 우수한 대기업들, 특히 국내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을 하는 전자나 자동차 부문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에 집중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부품에 대한 글로벌 아웃소싱도 활발히 진행되었죠. 물론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내 부품 산업의 기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의 노력들이 우리가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 기업의 채산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극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개혁조치들의 열매가 주로 대기업 쪽에 집중되었음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나름대로 성장도 하고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도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그 만큼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개혁 조치들의 긍정적인 측면이 주로 대기업 쪽에 집중되면서 경제적·사회적·국가적 양극화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없고 또 국민통합이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의 변화, 세계화, 중국의 부상, 기술 진보 등이 실력 차이를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 구조적으로 산업 연관관계가 미약한 것도 원인입니다. 우리 경제는 특히 IT 산업 의존도가 높는데, 우리 IT 산업은 중간재 수입 비중이 52%나 되고 핵심 부품은 거의 수입을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용효과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국내의 연관효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성장은 해도 전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용 없는 성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되고 또 내수가 부진한 문제나 설비 투자가 부진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미래의 성장엔진을 못 찾지 않나 우려됨

대기업들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별로 기업 할 마음이 안 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권이나 다른 경제 부처나 금융계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투자만 하면 결국 돈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남에게 돈 쓰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기업들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시장에 의한 평가가 강화되면서 굉장히 몸조심을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몸조심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전을 갖지 못하고 미래에 성장할 그런 것들을 발굴하지 못하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결국은 그걸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과거 우리 기업인들이 아주 활기차게 투자를 하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을 하고 업종을 변경하던 그런 역동성이 요즘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3. 양극화 해소 방안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부동산의 생산적 이용, 사회안전망 확충, 개성공단 활성화 등이 필요함

결국은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데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출이 증가하지만 결국 그것이 소비 증가까지 연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반 성장도 중요합니다. 특히 대기업 경영자들이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같은 경우 계열화된 부품업체들을 쥐어짜서 막대한 이윤을 확보하고, 그것을 결국 노조와의 협상에 다 소진해서 엄청난 양극화만 초래한다는 것은 우선 임시 방편으로 경영하는데에는 편하겠지만 다른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도 경쟁력을 잃어 가게 될 것입니다. 언 발

에 오줌누기 식의 경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업들 중에는 아주 우량한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량 기업일수록 동반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경영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양 경영 기법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단기 업적 위주에 치중하고 당장 주가를 올려야 되는 부담이 경영자들을 압박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한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금이 400조 원이라고 언론에서 자꾸 쓰는 걸 보면 이것이 조금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금은 100조 원 정도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100조 원을 증시,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 정부나 여당도 정책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권에서도 노력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양극화로 인해서 생긴 계층간의 차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서 완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통합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몇 가지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도록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필요한 시점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less oblige)라고 하는 특히 지도층이 가져야 될 자세랄까,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공감을 하고 그런 것을 스스로가 실천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류국가는 일류기업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회영 선생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의 대표적인 귀감임

이 만듭니다. 일류기업이 많아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류기업이 없이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근에 잭 웰치 전 GE 회장이 '서울에서 성공하는 기업만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형평성을 이유로 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기업이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하는 것과 공정한 게임의 룰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잘 조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성과나 성장만을 위해서 모든 다른 것들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도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저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국가와 인류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사(白沙) 이항복 선생의 11대 후손이고 8대에 거쳐서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의 후손인 이회영 선생 일가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분은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자 3만 석에 해당하는 전답을 다 처분하고 59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도 설립하고 20여 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여섯 형제 중에 다섯 분은 돌아가셨죠. 이회영 선생도 일본 경찰에 붙잡혀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동생이신 이시영 선생만 돌아오셔서 국정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의 대표적인 귀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모습까지는 가지 못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책무는 저야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되고 기업인들은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서 없이 몇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 경제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데 저는 정책 일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청계천이죠. 이 청계천의 효과, 투자한 돈에 비해서는 효과가 극대화된 사업인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당이 달라서 행복한 기분이 덜 들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청계천을 밟으면서 굉장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제도 제가 가봤더니 국민들이 걸으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군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 그것이 정책의 요체가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심의 한 가운데에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국민에게 주는 효과는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우리 정부는 이 청계천 효과에 대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봄이 왔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춥게만 느끼는 정부와 국민간의 괴리감이 문제임

우선 정책효과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정책과 여론간에는 기온과 체온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봄이 왔다고 생각하고 티셔츠를 입고 있고, 국민은 아직도 마음이 춥기 때문에 코트를 입고 있는데 정부가 자꾸 국민들 보고 코트를 벗으라고 하면 벗으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괴리감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방송을 할 때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들은 토론할 때 스튜디오에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 정도 이기고 나머지는 브라운관 밖에서 듣는 청취자들에게서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 프로입니다. 반면 아마추어들은 상대를 아예 죽여버립니다. 토론에 지면 큰 일 나는 줄 아는 것이죠. 토론장에서 상대방을 죽여버리면 토론은 이기지만 밖에서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의 정부와 국민간의 괴리감은 이처럼 스튜디오적 정서와 TV 밖에서 보는 사람들 정서 사이의 차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데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감성적이었어요. 감성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낮게 평가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 객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현 정부의 평가를 역대 정부의 평가에 비유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중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높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승만 정권보다 종합 성적이 높았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경제 분야인데 최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제 분야는 역대 정권 중에서 최저인데 전체 평가는 중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만 잘 하면 최소한 학점을 B 플러스에서 A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정책적인 문제점을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출범했으며 이를 극복할 리더십이 필요함

그러면 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출범했고 정책 마케팅의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요층이 상당히 분화되고 있습니다. 양분화되고 있고, 이분화되고 있죠. 정책 수요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매체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종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양극화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발전이 되면 그 사회에 적응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고 그 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양극화가 여건은 아닙니다.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자체가, 극복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책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했다고 인정합니다.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감성적 대화에서 실패했음

그러나 그 속에서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국민과의 감성적 대화에서의 실패를 들겠습니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입니다. 청계천이 그렇지 않습니까? 청계천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가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단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GNP보다 GNH(Gross National Happiness), 즉 국민총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행복을 줬다는 측면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현대의 소비자들은 옛날처럼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음료수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냉장고의 디자인에도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한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수요자들에게 행복과 재미를 줘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우리 잘 했다는 자화자찬적인 생각보다는, 정책이 그 사람들의 감정에 녹아 들어가야 되요. 그런 면에서 현재 국민들은 상당히 감성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경우 정책의 형식은 그럴듯 한데 정책 자체가 감성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감성적 리더십을 택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자체는 거칠어요. 통합적 측면보다 양분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좌우간 국민과의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니까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에 대해 느끼는 감성적 평가는 아주 낮거든요. 이런 것들이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감성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감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괴리 현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책의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책이 너무 많고
그 순서와 타이밍
이 맞지 않음

밥을 먹을 때 아무리 반찬이 중요하지만 밥 먹기 전에 국을 가져온다거나 식사하기 전에 디저트를 먼저 가져온다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죠. 반찬을 한꺼번에 다 차려버려도 먹는 사람이 먹기도 전에 보고 질려버리게 되죠. 지금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정책이 너무 많으니까 국민들이 헛갈리는 거죠. 우리 국민들 아이큐가 평균 250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한꺼번에 차려 놓으면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연계가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차리기에 순서가 중요하듯이 정책의 순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감성과 국민들의 수용 능력에 맞춰서 차려야 하는데 말이죠.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보면 어떤 것은 너무 빨라요. 국민들이 준비도 안 했는데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어떤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데 너무 지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정책의 메뉴가 아주 좋은 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성과로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성적 리더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감성적으로 하는 정책을 국민들이 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아직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과 통
합의 리더십이 필
요함

양극화 현상은 발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꼭 해결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의 비전과 통합의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양극화 자체를 2년 내지 3년 만에 해결한다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세계적인 리더나 기업의 리더를 보면 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 시청에 천 명 뽑는데 11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젊은이들이 희망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없어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내에서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취업률이 높아지거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우리의 산업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외국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경쟁력도 있습니다. 한류를 보더라도 늙은 세대보다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장을 열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실업 대책에 들어가는 몇 조원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해외 취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을 진짜로 바꿔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속에 한국으로 자리잡는 기회를 만들어야 나가야 됩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21세기 성장 동력을 개발해야 함

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 마인드 문제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은 기업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의 투자 마인드 자체가 대한민국이 살아나가는 21세기 성장 동력입니다. 그걸 꺾어 놓고 자꾸 성장 동력을 개발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체로 상태에 있을까요? 주가가 저렇게 상승하는 데도 기업의 투자 의욕은 나지 않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언론에서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기업 때리기 등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가장 큰 애국자는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지 통일 비용도 절감되고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애국자로서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통합, 사회통합은 요원함

(정세균 열린우리당 임시 당의장)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막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없이는 국민통합, 사회통합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 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워크숍에서 외부 전문가 분들이 개혁을 하는데 일은 전방위로 벌리고 수습은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능하다, 태만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일반 국민과 정치권, 정부를 연결해 주는 통로가 결국은 언론인데, 그 중간 전달자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장 큰 실패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모두가 능력이죠. 그런 것들을 못한 것도 무능의 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청년 실업은 정말 이 시대의 최대의 과제이죠. 그런데 묘안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만 해외 쪽에서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응도 좋은 것 같고요. 100% 충족은 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쪽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사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은 기업 쪽에 유리했음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 결국 기업 얘기를 하면 노동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노사관계가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나 정치권이 주로 관여하는 일은 노사관계의 어느 쪽이 어떻게 되도록 정책을 펴고 방향을 잡느냐로 귀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조치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기업 쪽 편을 많이 들고

노동 쪽에는 굉장히 가혹했다는 평가를 하는 게 옳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기업들은 반기업 정서를 정권이 불러일으킨 것처럼 말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줄 것은 다 주고 평가는 거꾸로 받고 있는 셈이지요. 아무튼 저도 일자리 창출이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라고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교수님의 여러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당의 책임 있는 분들과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문제는 원래 제가 야당 시절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선거가 끝나고 이명박 시장님이 청계천 추진을 할 때, 당내 간부회의에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중에 5년 후 10년 후를 잘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때 제 생각에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국정감사 나가는 분들에게도 가서 반대하거나 흠집내기를 하지 말고 나중에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감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청계천 문제를 가지고 절대로 시비를 삼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는 잘 된 것이고, 다른 나라도 가보면 고가 도로가 계속 시내에 있는 것은 미관을 해치고 결국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한 자유화가
부작용을 양산**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서로 섞여 있어서 하나 하나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뒤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투자라고 봅니다.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자유화를 너무 빨리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이 여러 군데 지점을 세우고 경쟁하다가 안 되면 스스로 문닫을 것 아니냐,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정부 관련된 일을 했지만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났습니다. 외환위기가 난 후 은행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니까 젊은이들이 취업이 됐는데 갑자기 지점 줄이고,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우리가 자유화도 좋고 신 자유화도 좋지만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했습니다.

양극화 문제의 해결도 성장이 전제가 되어야 함

그 다음으로 이 나라 경제의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성장입니다. 양극화 문제도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당에서는 신 복지형 고도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어? 이제 뭔가 하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국가정책의 방향을 총괄하는 기능이 없어 각 부처별 방향만 존재

다음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옛날의 기획원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각 부처 나름대로의 방향 감각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전체 경제 성장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산하의 각 위원회는 많습니니다. 위원회에서 보고서는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걸 담당 부처에서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여부입니다. 얼마나 활용할까요? 그래서 정부는 우선 비전을 내걸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지금 우리 경제의 비전이 뭐냐고 물으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당이나 정부 고위층이 비전 없다고 하면 발끈 하시거든요. '왜 비전이 없느냐, 동북아도 비전이 있고 균형 발전도 비전이 있고, 이게 다 비전이 아니냐' 하십니다. 그런데 비전은 글로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주장은 비전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공무원들도 ‘아! 그래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때 그것이 비전이거든요. 제가 한번은 동북아 중심국가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주장하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부처에, 그것도 중요한 부처의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뭐, 옛날 세계화하자는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동북아 중심국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공무원 사회에서의 공감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청와대에 가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비전을 크게 내걸었지만 지금 동북아 위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경제 자유구역이지만 2004년 그 분야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5년에 해당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기업이 생각할 때 정부가 내걸은 것이 저렇게 되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투자 의욕이 상실되는 거죠.

**남북 경제교류에
원칙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함**

(유완영 IMRI 회장) 개성 공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통일부가 남북경협공사라는 것을 만든다고 해서 10개 부처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남북 경제교류에 대해서 원칙이 있는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경협공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남북 교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경제 교류를 하겠다는 것은 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에 진출을 하게 되면 정부가 많은 토지나 시설 투자를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으면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과의 경제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취약한 점은 뭐고 경쟁력은 뭔지 알아보고 어떤 산업체를 유치해야 북쪽과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도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하지 않

겠습니까? 일반적인 교류를 위해 많은 돈들이 오고 가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성과를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2차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쯤 1차 공단 15개 업체의 성과와 문제점은 뭔지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고 가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의 협정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전략 못 짜서 안 된다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 조일 관계나 조미 관계가 개선됐을 때 우리는 어떤 품목을 가지고 경제교류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기업들을 어루만져 주는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민간 기업이 북한에 투자했던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협공사가 대신 그 사업을 인수해서 다시 새롭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경협공사를 통해서 그 쪽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전반적인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귀담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산법 해결방안과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국정감사 동안에 이슈가 됐던 삼성그룹에 관련해서 금산법 문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오늘 당정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당에서 어떻게 풀어 가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후속 법안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임시 당의장)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우리들의 의지로 한 측면도 있지만 그 당시에 IMF나 다른 외국 기관의 권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재정부가 금융개방을 순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금융산업 구조조정, 신자유주의도 좋지만 시장의 실패와 그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함

해왔었다면 그 충격이 덜 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애국적인 견지에서 빗장을 계속 걸어 잠그고 있다가 그런 사태가 되어서 타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활짝 열다보니 지금 토종 은행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국내 은행들을 거의 다 내 준 격이 되고 말았죠. 신자유주의도 그렇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주의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 만능주의로 가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면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그렇지만 시장의 실패, 시장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성장의 중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함

성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지난 번 대표연설을 할 때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복지문제도 얘기를 하고 해도 아무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도 그러시고 저희 일하는 사람들이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과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없이는 분배할 파이가 전혀 없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옛날 식의 성장 일변도,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성장 지상주의로 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성장을 해야 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중소기업에게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할 것임

남북 경제교류 관계에서 개성공단 이전의 기업들이 자기 책임하에 추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경영을 추진할 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발언권을 행사하고 과거 북미나 중국이나 다른 3자들에 의해서 주로 좌지우지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

니거든요. 그간에 정부든 기업이든 우리 쪽에서 공을 들이고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로 봐야지요. 물론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가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기업들이 그것들을 회수할 수 있는 상권으로 자리 매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같은 경우는 우선 2,000만 평을 2012년까지 개발하면서 800만 평은 공단으로 하고 1,200만 평은 배후 도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간에 미국 하고의 관계 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차 100만 평이 시범사업인데 거기에 25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5개 회사는 우선 한번 해보는 거죠.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보다 임금이 매우 저렴하니까 한계 산업이나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좋은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략 물자를 제한하는 것하고 원산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이 진척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업들이 자기 책임 하에서 잘 되면 스스로 잘 해서 잘 된 것이고 잘못되면 정부가 안내를 잘못된 결과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부가 좀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법률의 형평성,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구현 등을 감안했을 때 금산법은 해결해야 할 문제임

금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이,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5%룰을 도입했고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룰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삼성은 초일류기업이고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입니다. 삼성이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죠. 모두 삼성만 쳐다보고 있는데 삼성은 시기가 어쨌든지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지 다른 룰

이 적용이 되고 다른 기업들은 5%률이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은 지금까지 입법 이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수공을 하겠지만 5년,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기득권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분이 엉뚱한 측에 가거나 세계화라고 하는 명분 하에서 아무나 가져가도 좋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의 입장을 잘 생각하고 국민 정서나 법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균형적으로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강제 매각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 아니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이런 안들이 나오는데 아마 정부안보다는 좀더 진전된 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입장을 가지는 게 필요하죠. 정부하고 몇 번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또 정부는 정부안을 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리서는 일도 쉽지 않거든요. 정부에서 내놓은 안과 의원들이 내놓은 안 사이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몇 번을 만나면서 조율을 해서 적정선에서 당의 안을 만들면 그 안을 가지고 야당하고 재경위원회에서 절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책에 대해서 총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사람도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할 뿐이지 '이대로 하라'하고 주장을 한다든지 무리하게 관철시키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의견도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고 정부나 다른 어느 누구도 결론을 내놓고 가는 것은 아니고 순리대로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야당의 주장도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금산법 문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결론을 내릴 것임

8·31 종합대책은 저희가 12개 법을 이미 발의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내일 발의를 한 의원들하고 정책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입법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 야당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야당은 거래세를 없애자고 주장하는데 재원 대책만 마련이 되면 거래세를 없애지 못할 이유도 없겠죠. 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낮추자는 안하고 없애자는 안은 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없애자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요. 하루아침에 없애면 자치단체는 재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은 정책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보유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여야간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은퇴하신 분들은 보유세가 높아지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모기지제도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그 분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후속대책, 그리고 기존 3개월 동안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선 야당하고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기 국회에서 순리대로 하면 처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야당이 124명이면 굉장히 큰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도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을 하고 협상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이번 정기 국회 중에서 입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HRI

정리 및 교열

박태일 수석연구위원 (tipark@hri.co.kr) ☎ 02-3669-4008

이상우 선임연구위원 (leesw@hri.co.kr) ☎ 02-3669-4014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P)	2005(E)	2006(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8.5	3.8	7.0	3.1	4.6	3.8	4.5	
	최종소비지출 (%)	7.1	4.9	7.6	-0.3	0.2	2.6	3.6	
	민간소비 (%)	8.4	4.9	7.9	-1.2	-0.5	2.5	3.5	
	총고정자본형성 (%)	12.2	-0.2	6.6	4.0	1.9	3.1	3.1	
	건설투자 (%)	-0.7	6.0	5.3	7.9	1.1	0.5	1.5	
	설비투자 (%)	33.6	-9.0	7.5	-1.2	3.8	4.3	5.5	
대 외 거 래 준	경상수지 (억 \$)	122	80	54	119	276	110	80	
	통 관	무역수지 (억 \$)	118	93	103	150	294	230	120
		수출 (억 \$)	1,723	1,504	1,625	1,938	2,538	2,800	3,070
	기 준	증가율 (%)	(19.9)	(-12.7)	(8.0)	(19.3)	(31.0)	(10.3)	(9.6)
		수입 (억 \$)	1,605	1,411	1,521	1,788	2,245	2,570	2,950
	기 타	증가율 (%)	(34.0)	(-12.1)	(7.8)	(17.6)	(25.5)	(14.5)	(14.8)
소비자물가 (평균, %)		2.3	4.1	2.7	3.6	3.6	3.0	3.2	
금 융	실업률 (%)	4.1	3.8	3.1	3.4	3.7	3.6	3.5	
	원/\$ 환율 (평균, 원)	1,131	1,291	1,253	1,192	1,145	1,020	1,010	
	국고채금리 (평균, %)	8.3	5.7	5.8	4.6	4.1	4.2	4.6	